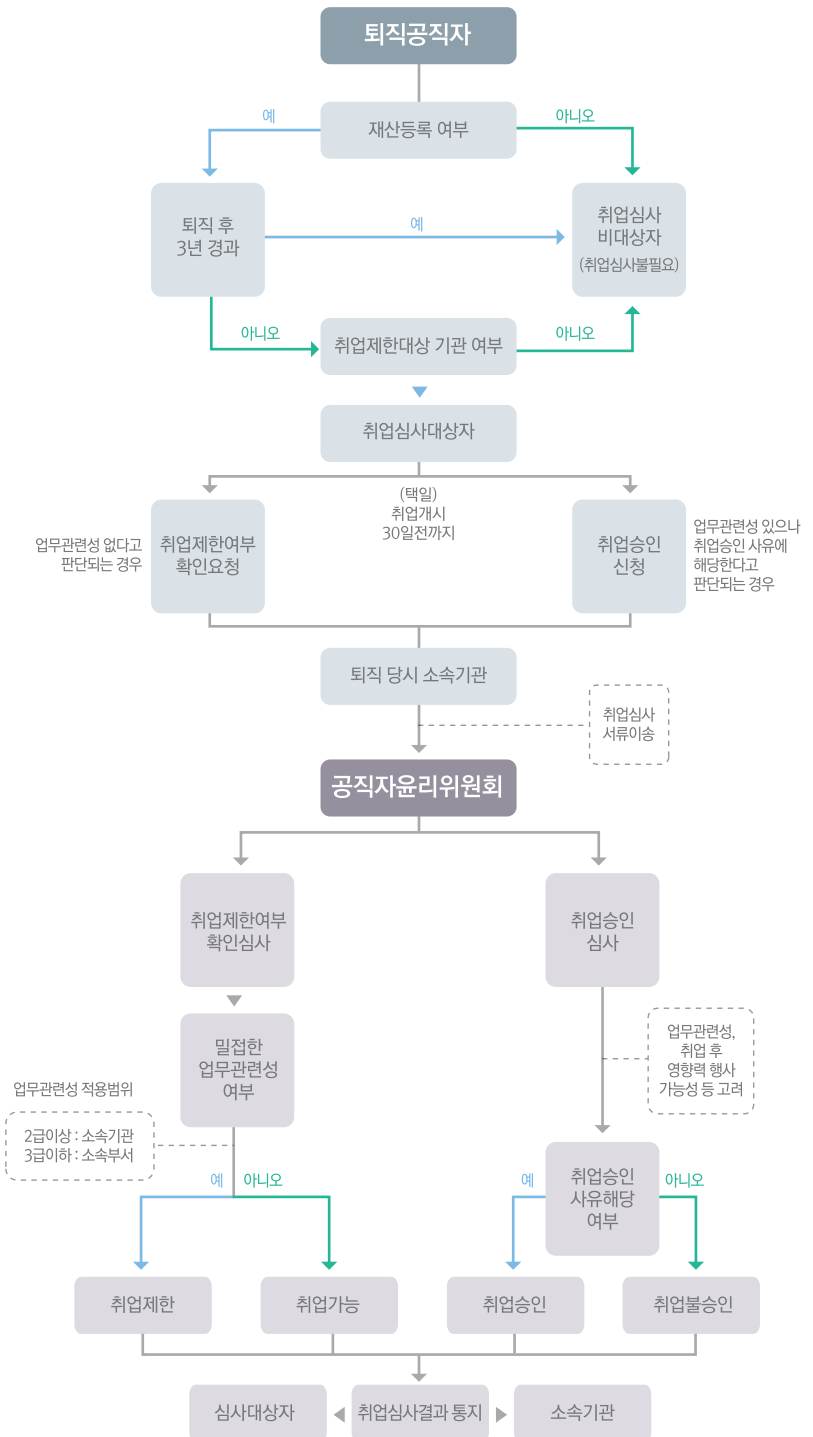


공직자윤리법령 주요 개정사항

(2015.3.31. 시행)

구 분	기 존	개 정
취업제한대상 기관 (비영리분야)	(확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형 공기업 - 안전감독 · 인허가규제 · 조달업무와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- 사립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- 종합병원 및 설립법인 - 사회복지법인 등(기본재산 100억원 이상)
취업제한기간	퇴직 후 2년간	- 퇴직 후 3년간
업무관련성 판단범위	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급 이상 :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부 : 본부+소속기관 전체 업무 • 소속기관 :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 업무 - 3급 이하 :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
자격증 소지자 취업제한 확대	총리, 장 · 차관 및 중앙행정기관장	- 재산공개대상자
취업승인요건 신설	(추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등은 업무성격 · 비중 · 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- 전문지식, 자격증, 근무경력,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취업이력공시 (2급 이상)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공개 ※ 의무자의 성명, 퇴직 전 소속기관명 및 직위,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등
취업심사 등 결과 공개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퇴직 전 소속기관명 및 직위, 퇴직시기 - 취업기관명 및 직위 - 취업 · 업무취급 · 업무내역서 심사결과 등
기관업무 취급 제한	대상	재산공개대상자 (1급 이상)
	기간	퇴직 전 · 후 1년
취업제한 등 위반시 벌칙 강화	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	- 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기타 제도개선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업무 대행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요건으로 마련 - 재산등록시 정치자금 예금계좌의 예금을 별도로 등록

취업심사 절차 안내



공직자 윤리법 개정

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

〈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(2015.3.31)〉

1. 취업제한대상 기관이 확대 되었습니다.

기존에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던 시장형 공기업, 안전감독 등 분야의 공직유관단체, 사립대학, 종합병원, 사회복지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

>>> 기존

1. 자본금 10억원 이상,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
2.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협회 등
3.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 · 회계법인 ·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4.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

>>> 확대

1. 시장형 공기업
2. 안전감독 업무, 인 · 허가 규제업무 및 조달업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
3. 사립대학과 그 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
4. 종합병원과 그 병원을 설립한 법인
5.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
※ 다만, 총장 · 학장 · 처장 등 직위에 있지 않은 사립대학 교수 · 부교수 · 조교수 · 겸임교원 등으로 취업시에는 취업심사 불필요

▶ 취업제한대상 기관 확인 :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gpec.go.kr>)

2. 취업제한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.

기존 >>>

퇴직 후 2년

퇴직 후 3년

<<< 개정

3. 취업심사시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
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

- 본부 근무자 : 본부의 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포함한 업무
- 소속기관 근무자 : 해당 기관의 업무와 하급기관의 업무

>>> 대상 :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

- 재산공개대상자, 2급 이상의 공무원(고위 나급, 2급 상당 별정직 및 2급 상당 직위의 연구관 · 임기제공무원 등 포함)
- 고검 부장,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,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,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,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
- 공직유관단체 임원, 한은 · 금감원 · 한수원 등의 1급 이상 직원

※ 법 제17조제3항, 시행령 제32조제3항 참조

4.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

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시 심사를 받던 대상자를 현행 국무총리, 장 · 차관 등에서 재산공개대상자*로 확대

* 재산공개대상자 : 대통령, 국무총리, 장 · 차관, 국회의원 등 정부직공무원, 1급 공무원(고위공무원 가급 포함)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의원,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,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, 공기업의 장 · 부기관장 · 상임감사 등

5. 공직자의 직무전문성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승인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.

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전문성이 인정되고 퇴직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취업승인 가능

-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등은 업무성격 · 비중 · 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- 전문지식, 자격증, 근무경력,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
6.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이력을 10년간 공시합니다.

>>>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신고하고,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

>>>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매년 2월 해당 의무자의 성명, 취업기관, 직위 등을 공시



7. 취업심사 등의 결과를 공개합니다.

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, 업무취급 승인심사, 업무내역서 심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, 이를 인터넷사이트에 공개

-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(직급), 퇴직시기
-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 · 업무취급승인 ·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
-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, 직위(직급), 취업일 등

8. 기관업무취급제한의 기간과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
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취업한 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업무(법 제17조제2항 각호)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할 수 없음

(기간) 퇴직 전 · 후 1년 → 퇴직 전 · 후 2년

(대상) 재산공개대상자 →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

9.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취업제한 · 업무취급 · 행위제한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.

>>> 기존

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>>> 개정

2년 이하의 징역,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* 참고 : 1~4번, 6번, 8~9번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3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됨